

이번엔... 김이수 임명동의안 11일 표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민주당 “더 늦출 수 없다” 한국당 보이콧 등 ‘변수’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거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려고 했다. 이는 지난 1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2일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민의당이 한국당의 불참을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청하면서 4일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당이 “2~3일 정도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이유로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6일 “이번 주에 가급적 하자는 입장이라는 한데 내일(7일) 본회의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본회의가 있는 다음주 월요일(11일)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1일을 처리 시점으로 정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1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일에도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의 문제가 김명수 후보자와 엮여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중인 것도 태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107명)이 보이콧을 풀고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



MBC 출신 의원들 “언론적폐 양산 주범은 한국당” MBC 출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노웅래·박광온·박영선·신경민, 국민의당 정동영·최명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이유로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장겸·고대영 사장을 지지하려다 이들과 함께 몰락하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6명)을 합치면 과반(150) 확보는 가능하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균형법 조항의 합헌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강하게 ‘임명 반대’ 요구를 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보이콧으로 불참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이 없어도 표결에 과반 참여는 가능하고 이때 찬성 과반 확보가 더욱 쉽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그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가 본회의 통과와 관련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사보타주다. 교섭단체 연설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해 국가안보와 민생 위기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출신 박영선·노웅래·신경민·박광온·김성수 의원은 이날 같은 MBC 출신인 국민의당 정동영·최명길 의원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적폐를 양산하는 데 KBS·MBC 경영진이 공범자라면, 주범은 지난 9년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보이콧까지 선언했는데, 집권 시절 공영방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섰던 한국당이 과연 언론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성 장흥군수 민주 복당 신청

전남 단체장으로선 처음... 지방정가 개편 신히탄 주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무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에 나서고 있어 지방정가 개편의 신히탄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무소속 단체장들의 입당과 함께 기존 정당 소속 단체장들의 탈당 또는 당적 변경도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의회, 새천년민주당 등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박 군수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서는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무소속을 유지해왔다.

김 군수의 복당 신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현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이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15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당, 5명이 무소속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과 당적 변경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있는 박홍을 목표시장의 경우도 지난 7월 탈당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강진원 강진군수 등도 복당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출마 예정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복당과 당적 변경은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복당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당적 변경 등도 시사하고 있지만 복당 여부 등은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지방선거 체제 전환

선거기획단 설치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선거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5일 제2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외협력실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도당은 사무처 신임 정책실장에 김호진 전 기획국장, 대외협력실장에 송진

후 총무국장, 기획국장에 양기호 민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홍지영 대변인(홍보국장 겸임)과 정대진 조직국장은 유임됐다.

도당은 이날 내년 6·13지방선거 준비의 핵심업무로 통합·집행 기구인 지방선거기획단 설치기로 의결했다.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 산하에 ▲지방선거 공약TF ▲도민소통위원회 ▲지방정치아카데미 등 3개 기구를 두고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가라운지

황주홍 “정부, SOC 예산 호남 차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깎인 광주·전남 차별 홀대 관련 검토’ 자료를 인용, 호남 지자체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건의액 대비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률은 26.78%(1조7500억원 건의, 2879억원 반영)

다. 반면, 지자체 건의가 없는 데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 호남지역 SOC 예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광주 시와 전남도의 경우 역대 정권의 호남 차별로 인해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 시설이 호남은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크게 미흡하다”며 “영남의 경우 지자체가 건의하지도 않고 이월해도 상당한 사업을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례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전무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다당제는 시대정신... 文정부 인기영합 행보”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정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개헌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없는 행보와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

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다”며 “지난 추경안이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전락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 가고 만기전락 대통령만 있느냐”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민은 불안하다”며 “외교·안보 진용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의 ‘김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대 중고생 또래 폭행 경악 정치권, 소년법 개정 목소리

최근 10대 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방랑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입산)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법원 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 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병원적합, 골프장, 대형식당, 최적합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T. 062-714-2251